

열린세상

임운

전 금호고속 상무·여행작가



사유원을 걸었다. 경북 군위에 있는 사립 수목원이다. 소묘하며 사색하기 좋은 숲이다. 반가사유상에서 이름을 빌어왔다고 한다.

극우 유튜브 매몰 경계해야

불상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상념에 잠긴 미륵보살이다. 20만 평의 숲에 9개의 건축물과 카페, 레스토랑의 인공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과 건축물의 경계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레 녹아든다. 온종일 걸으며 눈을 씻고 귀를 열며 머리를 비우는데 딱 좋은 곳이다. ‘자연이 자연스럽지 않고 자유스럽지 않다면 자연이 아니다’는 철학을 지키려 애쓴 티가 났다. 베이비그린으로 물든 사유원의 오희은 뜻사랑의 설렘과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자연은 이토

록 찬란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생각은 소란스럽고 마음은 울분이 가득하다.

우린 겨울에서 봄까지 공포와 혼란, 의지와 열정으로 건너왔다. 나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꼴을 목도 했다. 불합리와 몰염치한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험하는 시절이다. 그토록 목놓아 부르짖던 자유를 빼앗으려 했다. 이울배반적이며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퇴행적 행동을 했다. 순리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누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인 나만 옳다는 편협이 초래한 결과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끝 바른 달콤한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 탓이다. 악마의 대변인은 부재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했다. 극우 유튜브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나치게 유튜브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알고리즘은 동류의 영상을 추천한다. 편식은 정신건강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반복 학습은 그릇된 확신을 만든다. 사유 없는 확신은 위험하다. 아집을 키우고 편견의 수렁에 잠긴다. 확증편향에 이르러 나만 옳다는 독선에 빠진다. 확국은 파국을 몰고 오는 독단적 행동을 하게 된다. 현란한 영상에만 기거하지 말고 사유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의심하고 성찰하고 이해

생각 좀 하고 삼시다

해야 한다.

사회는 나와 너라는 관계, 확장하면 오당과 여당이라는 기본구조로 작동한다. 오와 여를 불문하고 가치와 이익추구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달성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정반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굴러간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관심과 이해보다 욕심과 저주가 남무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간명하다. 공평과 독점을 가름하는 저울추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 자유를 소수만 누린다, 공기를 특정 부류만 호흡한다면 그른 일이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냥 내 것 뺏는 게 제일 나쁜 일이다.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뺏지는 말아야 한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일이다. 누구나 하는 생각마저 못 하는 바보는 되지 말자.

사유, 가치·진리 찾는 여행

하루 중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자. 스톱킹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영상물에서 벗어나자. 눈을 감고 멍 때려도 좋다. 시 한 줄 읽는 일도 좋다. 그 시간에 생각을 하자. 정신의 디톡스를 하는 일이다. 사유란 가치와 진리를 찾는 합리적 추론 여행이다. 내면과 타인, 자연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대상에 관한 관심이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응시이다. 자신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다. 그러니가 생각 좀 하고 삼시다.

생성형 AI, 기술 넘어 인간의 문제다

논의에서 “그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 물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도구에 불과하다. 진정한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단순한 ‘기술 리터러시’를 넘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AI 리터러시를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단지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적·윤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물론 생성형 AI는 유용하다. 문서를 요약하거나 정보를 생성하고 때로는 창작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계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은 사유할 수 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기술에 주도권을 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된다.

기술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AI 기술은 일부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하고 통제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지식 식민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에 직면하게 된다. 기술 주권은 더 이상 기술자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개인과 국가, 국제 사회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정의하는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다.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듯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 고유의 사유, 판단, 공동체적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ChatGPT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결국 우리 사회와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교통안전 사각지대 놓인 전동휠체어

힘이 크다. 인도로 다닐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서는 차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으로 간단한 접촉 사고로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응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대처 능력도 떨어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륜 오토바이처럼 별도의 등록을 거치는 행정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안전교육이나 야광 반사지 부착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실질

적인 방안이 없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륜 오토바이처럼 등록, 의무화와 안전도로 확대, 취약계층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인도 내 환경을 개선하거나 야광반사지 등 야간 보호 스티커 부착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용균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감

기고

김용권

국제학박사·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 문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수천 년 걸쳐 인간이 축적한 언어, 지식, 사고 체계를 기계가 학습하고 재구성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는 기술적인

독자투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의료용 스쿠터, 보행 보조용 의자차로 불리는 전동휠체어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사망) 원인이 되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항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인 유도차, 전동휠체어(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가 보행자로 규정돼 있어 차도 이용이 불가능해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실제로는 인도의 불균형과 노면의 불법 시설물 방치 등의 문제로 전동휠체어 사용자인 고령 어르신들의 도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

사설

대선후보가 새겨야 할 지역 경제계 목소리

광주경총과 광주상의, 그리고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한목소리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지역 경제계의 요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생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새겨두고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상의는 광주 민간·군 공항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 필수 과제라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주도의 이전을 요청했다. 광주와 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 산단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축도 제안했다. 또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의 빠른 진행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안정적 재정 지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과 국회 광주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경총도 내수 부진의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및 고용 위축 등으로 광주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소상공인 전통시

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안정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직원 출산 장려금 확대를 위한 간접세 부과,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지원, 협동조합 구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상속세 인화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 과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 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요구다. 또 대부분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 같은 지역 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약으로 반영하고 정책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전남 문화 정책 획기적 확대 절실

전남도민의 문화 향유율이 5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지만, 경제적 낙후와 교육 기회 불균 등 등에 이어 문화적 소외마저 심화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도민들이 최소한 전국 평균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문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민 문화 예술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전남의 문화 예술행사 관람률은 54.4%로 전국 평균 63%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영화관람이 44.8%였을 뿐, 대중음악·연예는 14.0%, 미술 전시회 관람 3.2%, 뮤지컬 2.5%, 전통예술 2.5%, 문학 행사 1.4%에 그쳤다.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도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할 때

‘접근성’과 ‘내용과 수준’을 중시했지만,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는 등 접근성이 취약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2022년 46.5%이던 도민들의 문화예술관람률이 2년 사이에 7.8% 상승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관람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관람을 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이라도 근린생활권 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제공 등 문화 향유 증진과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길 바란다.

사진 속 세상



A-10 공격기 시범비행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A-10 공격기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정치부 (062) 720-106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경제부 (062) 720-1067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사회부 (062) 720-1050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